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9.16(금) ~ 2022.9.22(목)

제공일시 2022 09 3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9.16(금) ~ 2022.9.22(목)

제공일시 2022 09 3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유럽연합, 수소 생태계 구축에 공적자금 7조원 투입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에 최대 52억 유로(약 7조2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CNBC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음
-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수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IPCEI Hy2테크' 프로젝트에 최대 52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 해당 프로젝트에는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13개 국가와, 회원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29개 기업이 참여하며 유럽 전역의 대학, 연구기관을 비롯해 최대 300여 곳의 외부 파트너와 협력할 계획임
- EU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추가로 70억 유로의 민간 투자를 확보하고,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등 수소 산업 전반에 관련된 수소 가치사슬을 다루는 데 초점을 둘 계획임

[\(조선비즈, 2022.09.22\) 이윤성 기자](#)

[\(아시아경제, 2022.09.22\) 이지은 기자](#)

2. [클릭 e종목] “EU,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韓 태양광 기업 호재”

- 유럽연합(EU)의 '강제노동 통해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법안' 추진에 따라,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옴
- 현대차증권은 16일 OCI에 대해, 에너지 안보와 ESG 이슈가 공급 과잉 우려를 압도할 것이라고 내다 봤음
- 현대차증권 강동진 연구원은 “중국 태양광 매도, 한국 미국 태양광 매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2022.09.16\) 지연진 기자](#)

[\(이데일리, 2022.09.17\) 김인경 기자](#)

3. EU, 위기 시 기업에 필수품 생산 강제 방안 추진

- 유럽연합(EU)이 공급망 위기 시 기업에 필수품 생산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함
- EU 집행위원회(EC)는 '단일시장 비상 수단' 초안을 발표했는데, 초안에 따르면, EC는 비상 상황을 선언할 권한을 가지며, 이후 필수품 확보를 위해 기업에 생산 설비 증설·재배치를 강제하고, 필수품의 우선 생산을 명령할 수도 있음
- 법안은 EU에 기반을 둔 기업에 적용됨 FT는 “실제로 발효되려면 EU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수개월 내 처리되기는 힘들겠지만, 현 유럽의회 임기인 2024년 전에는 통과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음
- 이는 역내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EC에 지나친 권한을 주는 조치이며, 특정 품목을 우선 생산할 경우 기업이 제3국 기업과 맺은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서울경제, 2022.09.20\) 이태규 기자](#)

[\(뉴스1, 2022.09.20\) 최서윤 기자](#)

1. EU, '산림 바이오매스' 단계적 감축 결정...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의문

- 유럽연합(EU)이 목재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사용을 감축하기로 했음
- 기후솔루션은 19일 "유럽의회가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14일(현지시각)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라고 밝혔음
-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PWB를 EU의 재생 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7~2022년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두고 단계적 감축에 들어가며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았지만, 환경단체들은 실제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지 않다며 철회를 주장해왔음 이번 결정은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나은미래, 2022.09.19) 최지은 기자

(서울신문, 2022.09.19) 정현용 기자

2.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25일부터 시행... 국가 주요 사업 온실가스 줄인다

- 환경부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음
- 지난해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임
- 평가대상은 전략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사업임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임
- 이중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됨

(ZDNETKorea, 2022.09.22) 이한열 기자

3. 美 "안보위협 M&A 차단"... 中과 거래 韓기업, 美투자 중단될 수도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국과 관련 있는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M&A를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 이는 '진화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심사 보장'으로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바이오 제조를 비롯해 AI,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하면, 안보와 기술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A 거래를 무산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했음
-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중국 투자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며, 국내 반도체 업체는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과 긴밀한 거래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규제한다는 방침으로 읽힐 수 있어 우려하고 있음

(동아일보, 2022.09.16) 박현익 기자

(서울경제, 2022.09.16) 윤경환, 전희윤 기자

(연합뉴스, 2022.09.16) 김동현 기자

1. 델타항공, 바이오 연료 처리 위해 정유소 준비

- 델타항공이 펜실베이니아주 정유공장에서 재생가능연료 공급재고 선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단독보도했음
- 미국 재생가능 연료표준은 정유사가 매년 증가하는 바이오 연료를 연료저장소에 혼합하거나, 이러한 연료저장소의 준수 크레딧을 구입하도록 요구함
- 델타는 10년 전 제트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 정유소를 인수했는데, 이는 항공사가 정유소를 처음으로 매입한 것임
- 이 정유소는 콩기름과 같은 농산물을 수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콩기름은 바이오매스 기반의 경유로 연방정부의 혼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델타는 이 정유소를 이용해 지속가능 항공연료 및 기타 재생가능연료 생산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uters, 2022.09.16) Laura Sanicola Laila Kearney 기자

2. 탄소중립 시대, '착한 플라스틱' 화이트 바이오가 뜬다

- 식물·미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연료나 플라스틱 대체 제품을 생산하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화이트 바이오 산업시장은 2019년 2378억달러(한화 281조원)에서 2028년 5609억달러(약 66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유럽 등에서 플라스틱은 물론 탄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 이란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2022.09.16) 이유범 기자

3. 세일즈포스, 카본크레딧 마켓플레이스 출시

- 세일즈포스는 탄소크레딧 구매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넷제로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했음
-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동성 부족, 배출권 프로젝트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부족, 일관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세일즈포스는 여러 제3자 평가회사(Calyx Global, Sylvera 등)를 넷제로 마켓플레이스의 창립파트너로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확보했음
- 마켓플레이스에는 세일즈포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커머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프로젝트에는 산림보호, 나무심기, 풍력발전, 태양광 조리용난로, 더 나은 농사방법 등이 포함됨
- 이 탄소크레딧은 독립적인 검증과정을 거치며, 10월부터 미국에서 탄소크레딧 마켓플레이스를 시작할 예정임 탄소크레딧으로는 11개국에서 90개 프로젝트를 제공한다고 됨

(ESGToday, 2022.09.20) Mark Segal 기자

1. 재생에너지나, 조류보호나... 독일, AI 충돌방지 도입 놓고 '갈등'

- 독일에서 새들이 풍력터빈에 부딪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음 [\(뉴스트리, 2022.09.22\) 김나윤 기자](#)
- 풍력터빈을 설치하는 구역이 야생독수리 희귀종인 '작은점무늬수리' 활동지와 겹친다는 점이 문제인데, 사냥할 때 먹잇감에만 시선을 고정해 풍력터빈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딪혀 죽기 때문임
- 독일 정부는 풍력터빈에 야생독수리가 부딪혀 죽는 것을 방지하려 AI '충돌방지시스템(anti-collision systems)'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독일풍력에너지협회(BWE) 등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법정소송까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남
- 시스템상 작은점무늬수리 번식기 내내 터빈을 꺼야 하는 셈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므로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높일 것인지, 새를 구할 것인지를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

2. 30대 그룹 ESG위원회, ESG 관리·내부거래 안건 처리 집중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30대 그룹 ESG 위원회의 2021년 이후 주요 안건을 분석한 결과, ESG 관리, 지배구조, 투자 및 경영, 사회, 환경 순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음 [\(데일리임팩트, 2022.09.20\) 이승균 기자](#)
[\(뉴스트리, 2022.09.20\) 이재은 기자](#)
- 주요 안건 비중은 ESG 관리 34.9%, 지배구조 32.3%, 일반 경영 및 투자 17.4%, 사회 10.2%, 환경 4.4% 순이고 안건 미공개는 0.8%였음
- ESG 관리와 관련한 안건은 ESG 전략 및 계획 수립이 90건으로 가장 높았음 지배구조 부문은 내부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이 137건으로 주를 이뤘으며, 환경 분야 논의 안건은 17건에 그쳤고, 그중 친환경 사업 관련 안건은 12건, 사회 부문은 사회공헌 안건이 46건, 안전 및 보건의 12건, 인권 4건이 있음

3. 표준산업분류 세분화 열분해유·바이오매스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안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 산업분류 정비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음 [\(이투뉴스, 2022.09.21\) 이상복 기자](#)
- 석유화학 업계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등에 투자하지만, 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없어 산업 단지 입주 시부터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것임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탄소포집이용저장),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를 만든다는 계획임
- 아울러,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해,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도 구분하기로 했음
- 이번 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 주관 아래, 내년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국가통계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2024년 1월 고시될 예정임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9.16(금) ~ 2022.9.22(목)

제공일시 2022 09 3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일본·미국·영국 등 LNG 공급 문제를 수소로 해결... 미국은 에너지 무한 공급하는 무배출 핵융합 지원

- 수소 에너지 장관급 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됨. 일본 경제산업성(산업부)은 26일 회의에 참여한 각국 에너지 장관들이 저공해 수소 연간 생산량을 현재 100만 톤에서 2030년까지 최소 9000만 톤으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 로이터 통신은 미국, 호주, 독일을 포함한 20개국 에너지 장관이 러시아 침공 이후 발생한 LNG 공급 문제를 수소 공급 확대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보도함. 장관들이 합의한 '저공해 수소'는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를 모두 포함함
- 국내 대기업들도 수소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음. SK그룹은 2025년부터 25만 톤 규모의 블루수소를 생산하고, 포스코는 2050년까지 수소 생산 500만 톤 체제를 구축해서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음
- 수소는 철강, 석유 및 가스 등 산업의 탈탄소화를 달성하여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연료로 인식되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소경제를 '좁지만 가능한' 길로 표현하며, 수소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음
- 장관들이 합의한 연간 수소 생산량 9000만 톤은 IEA가 제시한 양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임. IEA는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950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음
- 블루수소는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생산하지만, 배출된 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여 배출량을 제거함.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하여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함.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은 연간 수소 공급량을 현재 200만 톤에서 2030년까지 300만 톤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소가 LNG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면서, 천연가스가 주로 사용되던 가정용 난방에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0년까지 LNG로 가열하는 난방 장치와 온수기 판매를 금지할 예정임.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는 지난 22일 이 안건을 투표에 부쳤고 만장일치로 승인함
- 캘리포니아는 지난 15일에 신축 건물에서 LNG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던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유틸리티 기업은 신축 건물에 LNG 가스관을 설치하는 비용 일부를 고객들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됨
- 영국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85%로 한국과 전 세계 공동 2위임.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영국은 북해 유전과 가스전을 보유하여 가스 자급률이 42% 수준임에도 유럽의 에너지 대란으로 에너지 요금을 강도 높게 인상함
- 영국 미디어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각) "정부가 가정용 난방에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소를 화석연료 가스와 혼합하여 사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2026년부터 가정용 난방에 수소를 대규모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함
- 수소는 에너지 비용이 높아서, 사용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관건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컨설팅 기업인 콘월 인사이트(Comwall Insight)는 가정용 보일러에 LNG 대신 수소를 사용하면 2030년까지 난방비가 두 배가량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함. 콘월 인사이트는 2050년까지는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이 70% 늘어날 수 있다고 봄

(인팩트는, 2022.09.27) 송준호 기자

(인팩트는, 2022.09.27) 홍명표 기자

-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는 지난해 5월 네이처 클라밋 체인지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수소 기반 연료는 훌륭한 청정에너지 운반체가 될 수 있지만 비용과 위험도 크다고 분석함. PIK는 수소를 가정용 연료에 사용했을 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공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결국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PIK는 장거리 항공과 화학, 철강과 같은 분야에 수소 기반 연료를 우선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함
- 미국은 수소에 이어 무배출 핵융합 지원에도 나서고 있음. 미 에너지부(DOE)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글로벌 클린 에너지 행동 포럼에서 민간 협력으로 민간 핵융합 기업에 5000만 달러(약714억원)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함
- 기존의 원자로는 중성자가 큰 원자에 부딪혀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분열을 기반으로 함. 반면, 핵융합은 반대로 두 개의 무거운 원자가 서로 부딪혀서 무거운 원자를 형성할 때 일어나며,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음. 그러나 규모를 확장하고 상용화하며 공정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짐
- 5000만 달러(약 714억원)는 기업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고가의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핵융합 기업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핵융합 컨설턴트인 매튜 모이니한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자금조달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 이 자금조달은 기업에 정부의 승인 도장을 받아낼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 업계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앞으로도 핵융합 산업에 대한 자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퓨전산업협회(Fusion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민간 섹터 퓨전 산업은 벤처 캐피털과 기타 자금으로 약 50억달러(약 7조원)를 유치함
- 최근 주목할 만한 자금조달에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연구기관인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Commonwealth Fusion Systems)로부터 빌 게이츠, 존 도어(John Doerr),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CEO인 마크 베니오프(Mark Benioff)의 타임 벤처(Time Ventures), 구글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18억달러(약 2조5722억원)의 자금조달이 포함되어 있음